우암학원 창학66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reat Smile NAMBU
남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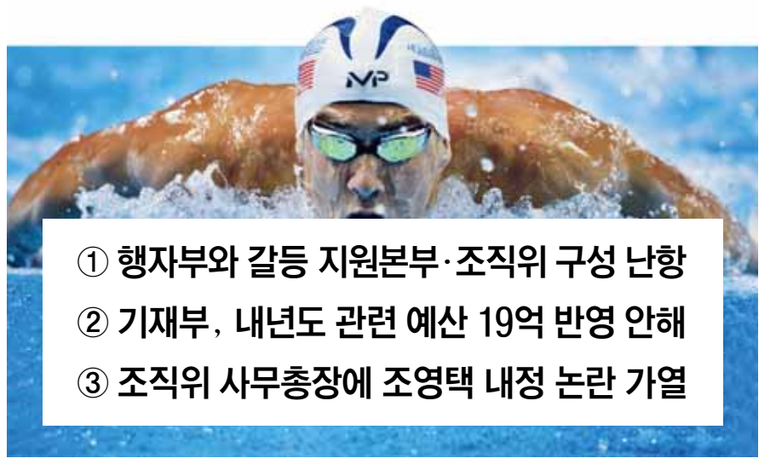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278호 1판 (음력 5월 27일) 2016년 7월 1일 금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세계수영대회를 가로막는 암초들

2019년 207개국 1만5천명 참여
제대로 치를수 있을지 우려 목소리



① 행자부와 갈등 지원본부·조직위 구성 난항
② 기재부, 내년도 관련 예산 19억 반영 안해
③ 조직위 사무총장에 조영택 내정 논란 가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회를 준비해야하는 지원본부나 조직위원회 구성 작업이 전혀 진척이 없는데다, 내년도 관련 예산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등 각종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 부이사관(3급)을 본부장으로 한 정원 24명에 2과 4담당 규모의 지원본부 조직 승인안을 제출했다. 설치기간은 다음달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이다. 시는 지난 3월에도 조직 승인안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행자부는 최근 회신을 통해 직급(3급) 책정의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려했다. 행자부는 조직위와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았고, 대회시설 사업계획과 총사업비 미승인, 현 단계에서 대회의 규모와 제반여건이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7월 정기인사에 맞춰 할 계획이었던 지원본부 인사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최근 시 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과 맞물려 행자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 노조가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한 바 있고, 이에 행자부는 물론 각 중앙부처에서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행자부가 광주시 조직관리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도 벌일 정도로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사무총장 내정 파동 뒤 조영택 전 국회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 문체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

일각에서는 세계수영대회가 국제대회인 만큼 결국은 청와대에서 사무총장 승인을 결정하는데, 조 전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74억원을 요구했으나, 문체부는 19억원만 반영해 기재부에 넘겼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 이 예산을 전액 미반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에도 국회 마지막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어렵게 20억원이 편성됐었다.

〈2면으로 계속〉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남공원에 전우치가 떴다 29일 광주 금남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광주시립극단의 뮤지컬 '전우치' 공연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유쾌한 작품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작품은 오는 3일(우천 시 취소)까지 매일 오후 8시 시민들을 만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화순 등 광주 인근 시·군 '공동화' 막기
나주·담양·장성 포함 땐 '과밀화' 우려

뉴스초점
공동학군제 藥일까 毒일까

'공동학군제'는 광주·전남 교육 환경에 약(藥)일까, 독(毒)일까.

화순군과 전남교육청이 광주와의 '공동학군제'를 추진키로 하면서 '학군(學群) 개편' 안을 놓고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모두 '공동학군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총론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각론에서는 지역별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는 점에서 실현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동학군제는 광주로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고 광주의 인재를 화순으로 끌어들여 인구 10만명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화순군 구상에서 시작됐다. 성사되면 1993년 광주·전남 공동학군제가 폐지된 이후 23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화순군 입장에서는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데다, 자녀를 광주지역 고교로 보내기 위한 전입(轉入)이 끊이질 않는 만큼 예산 지원을 확대, 화순 지역 고교 경쟁력을 키워 '지역 공동화' 를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당장, 능주고의 경우 지난해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나 광주 인재들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오히려 화순 뿐 아니라 나주혁신도시를 비롯, 장성, 담양도 함께 연구하자는 포괄적 학군개편을 언급했다. 화순만 하는 것보다 광주 인근 지역을 모두 포함해 검토하자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발끈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동학군제가 성사되면 '공동화'가 불보듯 뻔한데도 포괄적 학군 개편을 제안한 광주교육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교육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장성·담양과의 공동학군제가 이뤄지면 가뜩이나 과밀학급인 광산구·북구 지역의 교육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높다는 학부모들 목소리가 높다. 전남 학생들을 위해 광주 교육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데 따른 논란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재취업 등 지원
1인 하루 4만3천원→6만원
빅3·현대삼호중공업 제외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대형 조선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도내 조선사와 관련업체는 대형(1곳)·중형(7곳)·소형(68곳)·기자재 기업인 블록업체(193곳) 등 모두 269곳이다. 종사인원 수는 약 2만 7545명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新팔도유람-포항 불꽃축제 ▶18면
김기태-이범호 "찰떡 궁합"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